

“SOC 예산 감소는 건설업 생존뿐만 아니라 서민의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도 위협합니다”

Interview



허 승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 청광종합건설 대표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건설인의 전당인 논현동 건설회관의 벽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 문구다. 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건설업계가 느끼는 절박감과 하소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라의 미래인 SOC가 투자 축소로 낡고 줄어들면 이를 만드는 건설산업 역시 허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의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서울 지역 건설투자 확대에 주력해 온 허승 청광종합건설 대표 역시 SOC 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허승 회장은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

해 국민의 생활수준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게 되어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건설업계가 단지 정부에 SOC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 물량 가뭄과 공사비 부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동분서주를 마다않는 허승 회장을 만나 SOC 등 건설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SOC 시설 확충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놓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단기에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정부의 SOC 예산 축소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통계상의 수치를 보면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과 통계상의 건설경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며, 현재 건설업계는 건설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건설시장은 크게 보면 국내와 해외 시장, 공공과 민간 부문, 건축과 토목 분야 등 다양하게 나뉘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보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어 모순적인 상황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지난 2010년대 초반은 해외건설이 국내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민간 주택시장 수주액이 2014년 35.8조원에서 2015년 62.5조원, 2016년에는 67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3~4년 간은 주택시장의 호황이 시장을 주도하며, 수치상으로는 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주택건설업체에 국한된 것으로,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SOC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공공공사의 공사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비와 주요 자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경영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건설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5.1%, 2013년 9.0%, 2015년 4.9%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1%, 1.9%, 0.6%로 크게 감소되고 있어 공사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6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1% 감소하였고, 민간부문도 7.1조원으로 2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난 8월 조사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도 전월 대비 11.2포인트 떨어진 74.2를 기록하여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8·2대책으로 건설경기를 이끌어왔던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건설경기 전반에 부정적 지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 줄어들어 건설업계의 일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중소 및 중견 건설업계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SOC 예산의 경우 정부는 2015년 26.1조원, 2016년 23.7조원, 2017년 22.1조원으로 계속 축소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4조 4,000억원을 삭감한 17.7조원을 편성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우려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서민 일자리·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면서 SOC 예산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게 되어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실제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전 산업의 8.7을 크게 상회하며, 건설 취업자 수는 19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C 시설 확충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놓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단기에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정부의 SOC 예산 축소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5월 16만 2,000명에서 7월 10만 1,000명, 8월 3만 4,000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SOC 예산의 감소는 공공공사의 물량 감소로 이어져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서민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큼니다.

SOC 예산 감축은 종합건설업을 넘어 전체 건설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그런 만큼 SOC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달 12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SOC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SOC 예산 감축은 원·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건설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체 건설업계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한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달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시고 건설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 지역 SOC 예산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 사항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SOC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으며, SOC 물량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시·도회에서도 전체 건설업계 차원의 대응과 동시에 지역별 SOC 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해당 지자체에 적극 알리고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도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뒷걸음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크게 기대했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도 규제에 묶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업계의 물량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분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서울시는 서울이 '건설의 시대'에서 도시의 쾌적한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중심의 '건축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업계도 이러한 미래 선도 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지만 실제 건설현장을 가보면 천편일률적인 단순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시공하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기술, 장비 등)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눈앞에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건설산업도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 스스로 먼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제안형 민관복합 개발, IT·BT·문화와 결합된 새로운 건설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빌딩과 같은 첨단 업무시설 및 주거용 건설, 건설과 생명공학을 연계시

킨 바이오 시티, 스마트 도로 등 새로운 기술 및 산업 트렌드에 맞춰 환경 친화적인 건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이러한 도시 경쟁력 확보나 도시건설 기술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 장기 전략을 건설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감 부족과 함께 건설업계의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적정공사비의 미확보가 꼽히고 있습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예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복수 예비가격을 일정 비율 낮게 책정하고 품셈 및 제경비율 등을 자의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하며, 원가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불공정 행위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100억~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가 확대 적용되면서 원가율은 올랐는데도 2000년 이후 전혀 오르지 않은 낙찰률이 적용되면서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예정가격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적정한 예산을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고 설계금액에 대한 인위적인 삭감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로 다시 축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

에 대해서만이라도 99.7% 미만으로 투찰을 금지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도록 실적공사비 적용 방식을 개편해야만 합니다.

또한 현행 공공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와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모두 근본적인 입·낙찰 방식이 최저가낙찰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정가격이 설사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 실행 원가에 크게 못 미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산업, 특히 중소 및 지역 건설업이 생존을 넘어 지속 성장하기 위해 달라져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SOC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안전·환경 등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으로써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통적인 종합건설업계 사업 영역이 침해되는 입법과 정책이 넘쳐나고 있어 중소 및 지역 종합건설업체는 수주난에 시달리며 사면초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미래 사회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발 빠르게 사업 분야를 전향적으로 개척하여 50년 후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건설업체의 노력과 함께 건설한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건설산업 성장 기반을 다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END**

대담 : 이형우 출판팀장